

특별기고



황학택 시인·문학박사

문학은 미래를 지탱해 줄 힘이다

이 무렵 그러니까 1983년 새해가 밝았다. 탄허 큰스님께서 어느 날 연락도 없이 광주로 오셔서 필자 사무실에 방문하셨다. 갑자기 보는 자리였기에 준비 없이 모셨다. 오찬을 마친 후까지 큰스님이 세상 만사에 대한 예지적 말씀을 하셨던 시간은 약 7시간 정도였던 것 같다.

광주·전남 대한민국 문학 메카

어느덧 석양이 들자 오늘은 광주에서 주무시고 내일 떠나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스님은 “아니, 인연(因緣)이다 되었어요” 하며 일어섰다. 월정사로 가신다는 말에 “그럼 언제 날 잡아 큰스님을 찾아뵙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자 “역시 인연이다 되었다”고 하시며 훌훌 떠나셨다.

그 후 6개월 만에 탄허 큰스님이 열반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인연이다 되었다고 하셨구나’ 하고 깨달으니 어찌 후회막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제야 큰스님 영명하심을 다시 깨달았다. 탄허 큰스님은 학승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를 거울같이 정리한 예지를 갖춘 귀하신 선사였다. 큰스님의 말씀은 삶의 지침이 되곤 한다. 큰스님은 “한국의 미래는 밝다. 앞으로 한국은 정신명명 중심의 국가가 될 것이며, 진리와 지혜로운 사람이 많

어나오는 세상이 열린다”고 하셨다. 인간은 현대를 살아가며 삶의 본질을 망각하고 물질만능의 늪에서 길을 잃는다. 인간적 삶을 외면하고 개인적 욕구에만 집착하는 인간들은 본질에서 멀어져 내리며 허무한 종말을 맞을 것이다. 고귀한 순간, 삶의 미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정치도 종교도 아닌 바로 문학이다.

필자는 1995년 전남문학 회장으로 있을 때 전국 시도 문학 회장들과 뜻있는 전국 문학인들의 참여로 대전에서 시도 문학인 교류대회를 가졌다. 시를어가는 문학을 문학인들 스스로가 일으키자는 호소로 매년 전국시도문학인 교류대회 개최를 제안했지만 큰 뜻엔 동의는 하나 선포 앞 서기를 결심하고 2001년부터 전국지역 문학인 교류대회를 개최,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문학메카임을 선포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26년이란 시간의 흐름 속 지난 해까지 참여한 문학인이 무려 1만 3,550여 명에 이른다.

전국지역문학인교류대회는 1박 2일간 다양한 문학행사를 통해 문학중흥을 논하는 유일한 국내행사일 것이다. 문학메카 본부는 또한 문학메카 정립을 위한 골격을 수립하기 위해 수 년 동안 ‘광주·전남 문학통사’를 집필했다. 장르별 각종 문학

적 자료집 등 심혈을 다해 집대성하는 작업은 내일의 후손들에게 금지탑이 될 것이라는 자부심으로, 고된 나날이었지만 흐뭇하게 작업을 완수할 수 있었다. 26년의 세월 동안 각종 준비와 교류대회 등을 통해 문학메카 정립의 절차를 완료했음은 역사적으로 보람된 일이라 하겠다.

문학적 자료집 집대성 보람

사무실 운영과 교류대회 준비와 함께 일 년 내내 전국 문학인들의 산발적 접촉과 크고 작은 문학 행사 등에 드는 비용은 시루에 불 붙듯 했다. 밀려오는 서글픔은 말로써 다할 수 없는 역사의 뒤안길에 묻어두려다. 30여 년 남편에게 사달린 내조자는 병상에서 호소하고, 자식을 또한 아버지와 문학메카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필자의 개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학이란 사람에게 희망을 주지 않으면 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제 문학메카 정립이 끝나고 ‘대한민국문학 메카 메모리얼 파크’ 건립을 향해 채찍질 하고 있다. 방대한 역사적 작업이며, 개인이 아닌 인류의 산물이니 만큼 미래를 위해 누구라도 적극 참여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

갈매기가 끼룩끼룩 나는 남녘, 한려수도의 정겨운 토속적인 정취에 흠뻑 젖어 살았던 소년시절을 회고해 본다. 돌이켜 보면 소년시절의 정서는 오늘의 시심(詩心)을 불러일으키는 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다.

필자는 여중학교 재학 시절부터 큰 시인이신 정소파 스승님의 가르침으로 문학에 심취했다. 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나며, 그리고 노년에 이른 현재까지도 문학의 소중한 정신세계에서 떠나보지 않았다.

필자는 1980년대부터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문학메카임을 정립하고자 했다. 광주·전남이 예향이요, 문화수도도 일컬어지고 있기에 이를 뒷받침 하는데 문학만큼 탄탄한 장르도 없다는 생각이었다.

기고



정광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섬 소멸 막을 지속가능한 정책 시급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위축시키게 된다. 섬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류정곤 KMI 명예연구위원의 ‘우리나라 수산업 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산업·어촌은 해양생태계 보호, 생물다양성 유지, 해난구조와 구호, 국경해역 감시, 지속가능한 식량공급, 지역사회 공동체역할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중 해난구조와 구호, 국경해역 감시는 섬의 가장 큰 공익적 기능이다. 대부분의 섬 지역민은 어선활동을 하며 조업과정 중 국경해역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뿐 아니라 해난사고가 일어날 경우 구조와 구호활동에도 나선다. 섬 주민 감소는 이 같은 기능을 약화시키고 그 공백은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다.

섬이 정책대상이 된 것은 1986년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부터다. 이 법에 근거해 10년 단위의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제1차부터 3차 계획까지 30년간 총 3조1,000억원을 투자해 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들의 소득증대

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섬은 살기 불편한 지역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 소중한 삶의 터전이며 국가 자원의 보고로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결실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섬 지역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인해 어촌(섬)지역은 여전히 소멸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섬의 젊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 결국 외부에서 젊은 인구가 유입되는 길밖에는 없다. 단순히 관광객이 늘어서 젊어지는 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섬에 들어 제대로 정착해 후손을 남기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섬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섬과 섬주민의 지속성으로 바뀌어야 한다. 섬은 지속가능하고, 살고 싶고, 가고 싶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본다. 첫째, 법무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소멸 대응 법·제도 개선 ▲인구 대응 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기관 지정 ▲섬 어촌지역 인구활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지속

가능한 수산활동을 위해 노후 어업기반 정비와 기후대응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섬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섬 사회의 개방성 등 커뮤니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정주 인구(이주), 체류 인구, 관계 인구 등 정책인구 범위 확대를 통해 외부의 인재를 유입시키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섬 외부에서 인구유입이 촉진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 마련과 귀어귀촌자들에게 섬사회의 매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귀어 귀촌자 니즈 기반 지원정책 등이 뒤따라야 한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소규모 학교 지원 및 우수 지도자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전남은 2,165개 섬에 16만5,000여명의 주민들이 거친 바다와 싸우며 우리의 터전을 지키고 있다. 우리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섬 정책으로 섬을 미래 대한민국 도약의 거점으로 만드는데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특지광장

청소년들 디지털 성범죄 무방비 노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로 인해 학교 수업이 온라인·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지난 한 해 청소년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는 줄어들었지만,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SNS, 메신저, 게임 등을 통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에게서 어떻게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해야 할까? 요즘같은 IT 시대에서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스마트폰을 금지하고 통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렇듯 청소년들에게 성,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먼저,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 주로 구독하는 동영상, 어플 등을 잘 살펴보고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해야 하며, 만약 음란물에 접촉했을 경우 훈계를 하기보다는 성을 상품화시키는 부분을 짚어 왜곡된 성 인자라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

두 번째로, 불법 촬영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예전과 달리 요즘 청소년들은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며 자랐기에 흥미를 일으키는 영상, 콘텐츠는 하나의 놀이로 여겨진다. 그렇기에 불법 촬영물을 접하더라도 이것이 범죄라는 생각을 못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도 범죄이며, 그것을 공유, 시청하는 것도 범죄에 가담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

한 교육을 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회원 가입, 프로필 작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IT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10대의 경우 아직 법·도덕적 관념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기에, 가정과 학교에서의 올바른 예방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가정, 이웃, 사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다양한 정보 담긴 인터넷 속에서도 청소년이 안전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문소희 보성경찰서 경무계 순경

사설

‘캐스퍼’ 소비자 상생 더 신경썼더라면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역사적인 1호차 ‘캐스퍼(CASPER)’가 곧 도로 위를 질주하게 된다. GGM은 경형 SUV인 캐스퍼 양산체제에 들어가 올해 1만 2,000대를 생산하게 되며 내년에는 7만대 생산을 목표로 한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광주형 일자리의 첫 생산품이니 만큼 광주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환호와 찬사가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캐스퍼를 구매하겠다고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사전예약 첫날 1만9,000대로 대박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에는 잠재 고객 또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이어진다. 캐스퍼 소개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가격대가 높다는 하소연이다.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기 전 가격대가 1,000만 이하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설이 있었다. 그러나 막상 공개된 첫 상품 가격이 1,300만원대에서 형성되

고 이것저것 옵션을 달면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불만이 나온다. 그로 그럴 것이 GGM은 기존 자동차 회사의 고임금 구조를 극복한 생산라인 체제이고, 온라인으로 판매돼 중간유통 딜러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 차량 가격이 예상치를 넘은 2,000만원까지 형성돼 다른 준중형 차량으로 대체 구입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격이 다소 높은 데는 안전장치 등 그만한 기술·경제적 가치 때문이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GGM은 적정 임금과 적정 노동을 기반으로 노사상생을 실천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동반성장을 내건 우리나라 제1호 상생형 일자리 기업이다. 상생을 모토로 한 GGM이 소비자와의 상생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따른다.

학동 붕괴참사 유족들 눈물 닦아줘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 발생 100일이 지났다. 지난 추석 연휴에는 붕괴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다. 유족들은 이번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 17명이 탄 ‘운림54번’ 시내버스가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옆 중심사업구역 정류장에 멈춰 섰다. 그 순간 철거 공사 중이던 5층짜리 상가건물이 도로 방향을 무너졌다. 순식간에 ‘운림54번’ 버스는 건물 잔해에 파묻혔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참사였다.

감리자, 하도급 업체, 원청 현장 관리자 등 붕괴 참사 관련 재판은 현재 진행중이다. 관련 재판은 현장검증을 거쳐 순차적으로 공판을 시작했고 유가족들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고 직후 미국으로 도피한 문흥식 전 5·

18구속부상자회장 관련 구체적인 증거와 공범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밝혀낸 경찰은 문씨의 귀국과 구속으로 수사를 본격화했다.

무엇보다 비리의 연결고리를 추적해 붕괴 참사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재개발 사업 비위 전반을 밝혀야 한다. 문씨는 광주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사를 희망하는 일부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철거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동참사 시민대책위도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해 안전·생명 존중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재개발 비위 수사에 비로소 분개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참사 관련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음에도 각각 진행중인 재판도 병합돼 조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 여전히 ‘그날’에 머무르고 있는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다.

코로나 시대, 흠어지면 산다

기지사침

2학기 전면등교가 시작된 9월 광주·전남 일선 학교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혼란의 시간을 보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 방역이 비교적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이러한 주장은 개학 1주일 만에 무너져 내렸다.

광주는 물론 평양과 순천, 나주 등 전남지역 곳곳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나왔다. 감염경로가 뚜렷하지 않은 예도 있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겹치면서 일선 학교는 그야말로 긴장과 혼란의 시간을 보냈다.

추석 연휴를 지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현재도 코로나 확산은 진행형이다.

그간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방역 수칙을 따르며 코로나 확산 예방에 주력했다. 등·하교 시는 물론 시시각각 학생과 교직원들의 체온을 측정하며 건강 이상을 살폈고 급식실 이외의 공간 방역에도 온 힘을 다했지만 감염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아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학생들의 개개인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방역을 강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0대들의 무리 지어 다니는 또래 집단 특성도 감안해야 한다. 학교 뿐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학생들이



이나라 사회부 차장대우

어울리며 접촉하는 때도 있어서 교사가 이를 아우르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광주·전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생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교육부는 12~17세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을 검토하고 있다. 12세 오접종 등 각종 부작용 사례를 보면 백신접종 결정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나 스스로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방역이라는 것 자체가 한쪽에서만 시행한다고 해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 것이다.

코로나 장기화에 학생들 또한 피로도가 상당하겠지만 스스로의 방역 동참은 필수다. 제아무리 학교 방역을 강화하더라도 학생들의 참여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학생들에게 당부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코로나 시대 흠어지면 산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신고 182	▲인광 알콜음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수도 고장신고 121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전기고장 신고 123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응급의료센터 1339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판)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聲秀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 치 부 (062) 720-1060-62	경 제 부 (062) 720-1066-67	사 회 부 (062) 720-1050-53	사 회 2 부 (062) 720-1043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문 화 부 (062) 720-1071
사 회 1 부 (062) 720-1040	기 획팀사부 (062) 720-1045-46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